

위기가족의 향후전망과 정책과제

At-Risk Families in Korea: Prospect and Policy Implications



박정윤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위기가족은 그 발생과정에서부터 경험하는 문제의 범위가 광범위함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위기가족에 대한 접근은 현재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잠재적 문제가 갖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위기가족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통합성을 지향하며 예방성과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해서 실효성 높고, 가족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가족내외적 변화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한국가족의 위기를 경제관련, 돌봄관련, 해체관련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위기가족에게 제공되는 정책과 서비스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통해서 위기가정의 역량강화와 건강성 회복을 제안하였다.

1. 서론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급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정해진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앞만 보고 달리고, 성장주의가 최고 가치로 여겨지면서 절차나 과정이 무시되고, 외형과 임기응변적 삶에 익숙해지고, 안전불감증까지 일상생활에 젖어들고 있다(조선일보 2011-1-17). 거침없

이 달려온 수십년간의 성장가도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화, 수출 악화, 내수 침체 등 경제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경제관련 지표에 고스란히 표출되어 체감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은 개별가정의 반응으로 표출되고 있어, 가계소비 감소, 실질 가계최종소비지출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박종규, 2008; 고선강, 2009 재인용)²⁾, 체감경기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

1) 2009년 경제지표를 볼 때 작년(2008) 4/4분기는 마이너스 4%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2009년 1/4분기, 2/4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수출에서는 2008년 18%(11월), 17.4%(12월) 감소한 데 이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고용 측면에서도 당분간 마이너스 고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임(통계청 2008년 12월 고용동향 - 취업자수가 1만2천명 감소). 소비심리지수 역시 2008년 9월 이후 계속 하락세이며, 2008년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졌음. 즉 실질 국민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임(blog.naver.com/2010corea 재인용).

이지 않다³⁾. 경제 위기로 인한 개별 가정은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부가적인 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 혼인과 출산의 지연과 감소,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나 이혼 등의 자료들을 통해서 경제위기가 가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권희경, 2009)⁴⁾.

반면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힘이 되며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다. 김승권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가족생활과 가족건강, 본인의 자아존중감 및 가치관, 건강 등에 의하여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행복지표 21개 중에서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는 비록 개별 가족구성원이 이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행복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진

표 1.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 가중치

행복에 미치는 요인	21개 행복지표 중 순위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1위
가족의 건강수준	2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10위

자료: 김승권 외(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 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정, 2009)⁵⁾.

개별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제한된 자원으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관리의 주체이다. 또한 다른 집단과는 달리 호혜적이고 자발적인 돌봄을 통해 관계가 지속되며, 그 기저에는 이타성과 협력, 배려 등이 작용함으로써, 날마다의 생활의 유지·인간다운 삶·공동체문화의 형성에 기여한다(v.Schweitzer, 1991). 나아가 이타심, 도덕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정전, 2003: 181-184; 송혜림, 2007 재인용⁶⁾)의 요소들을 상호적으로 교환하고 체득하고 축적하는 생활의 단위라는 점에서, 가족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2) 고선강(2009). 주부의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질적 접근: 경제위기에 대한 개별가정의 이해와 대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99-118.

3) 2009년 3월 현재,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인식이 다시 악화,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추경 등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는 오름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 가계 저축과 부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음(이데일리, 2009-03-25 재인용).

4) 권희경(2009).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가족 외부지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59-68.

5) 진미정(2009). 가족의 위기와 가족정책의 대응: 가족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통합·예방·맞춤형 가족정책 발전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송혜림(2007). 생활과학의 발전전략, 대한가정학회 2007년도 춘계 통합 학술대회 자료집.

힘이며, 삶의 질을 나누고 향상시켜 나가는 생활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현재 개별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그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위기가족은 형태나 구조적으로 특정 유형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서 가족 기능이 취약해져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가정 또는 상황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개별 가정이 외부의 위협요소로 인해서 취약해지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갖고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위기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1) 경제구조적 변화와 가족의 위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 2~3년간 한국은 또 다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국가 전체의 경기를 추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일자리를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IMF 당시의 경제위기 상황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험한 경제위기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았으나 그 과정에서조차 개인과 특히 가족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09년 현재 우리사회는 또다시 경제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과거 1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위기라는

점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실업으로 인한 가구소득은 감소하고 실업당사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및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며, 실직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원과 친인척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실업상태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가족은 구성원들간, 사회와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가족문제를 야기시키고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것은 개별 가족의 선택이기보다는 사회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비선택적이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 역시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내부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를 갖게 된다. 경제적 상황악화로 인한 위기가족이 당면한 문제는 가족단위로의 문제해결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외적 환경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그 사회적 비용 지출은 매우 많다.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막대하지만, 일단 빈곤층이 된 가정이 다시 일반 가정, 중산층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는 빈곤층, 차상위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있으며 미래의 희망을 담보할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또한 국가의 지원 대상 수급권자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과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송혜립 외, 2009).⁷⁾

경제위기는 또다른 측면에서 위기직면가족을 양산하게 된다. 위기직면가족은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집단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가족을 지칭하는 말로써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는 일반 가정이나, 그 소득수준으로 보아 자산과 저축 등이 충분치 않아 이들 가족이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을⁸⁾ 하게 되면 가계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써 차상위계층/빈곤층이 될 잠재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족이다.

2차 가족실태조사(2010)에서 가족의 재정적 안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 '실직시 현재 소비지출유지기간'을 조사한 결과 실직시 현재 소비지출을 유지하기 곤란한 가족은 4.3%였으며 6개월 미만인 경우도 23.4%나 되었다(표 2

참조).

또 6개월~1년 미만은 20.5%, 1~2년 미만은 19.0%, 2~3년 미만은 25.4%, 3년 이상은 7.5%였다. 가구소득별로 볼 때,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50%, 100~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29.8%, 200~3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28.0%,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는 22.0%,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11.5%로 나타났다. 월가구소득 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재정 안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들의 실직시 사회적 안전망 등 사회보장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위기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연계되고, 이로써 소위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극빈층으로 하향화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그동안의 일상

표 2. 실직시 현재소비지출 유지기간

(단위: %)

구분		유지할 수 없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4.3	23.5	20.5	19.0	25.3	7.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4	40.6	20.1	14.4	11.5	3.9
	100~200만원 미만	5.5	24.3	19.6	15.9	27.0	7.6
	200~300만원 미만	2.7	25.3	27.7	20.0	17.8	6.4
	300~400만원 미만	2.9	19.1	21.5	21.1	30.6	4.7
	400만원 이상	1.6	9.9	11.9	23.2	39.8	13.7
모름/무응답		19.8	29.5	21.7	7.4	0	21.6

출처 : 조희금 외(2010)⁹⁾. 2차 가족실태조사 재구성.

7)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가족의 일상과 대안: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2009년도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8)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칠 경우 공식 실업자가 약9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노동연구원, 2009 - 박정윤 외, 2009 재인용).

9) 조희금 외(2010). 2차 가족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

생활에서 여유로운 저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여가, 주택마련 등에 접하며 평균치에 가까운 일상적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할 적응력이 크지 않고, 또한 포기해야 하는 삶의 질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결핍감, 준거집단과의 괴리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들 가족의 중산층 복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사후처리는 위기가족에 지원책에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즉 가정문제 예방과 가정의 역량강화가 문제해결만큼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2) 돌봄 노동과 가족의 위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실현 욕구, 평생 직장개념의 와해로 인한 1인 생계가구의 위험성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여성노동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이 해마다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볼 때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국제 경제 질서의 악화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경제위기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경제위기 이후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동

안 증가하였으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여, 경제위기의 여파가 주로 여성노동력에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경제 위기로 취약해진 가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구직 여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침체된 고용시장은 구직 여성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소지가 크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평소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받는 차별이 경제위기 속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여성은 임시직, 비정규직 등에 들어가기-나오기를 반복하여 이전보다 더 심화된 고용의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가계경제에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구직-취업-실직을 반복하는 기혼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가정의 공동화와 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황혜원과 신정미(2009)¹⁰⁾ 등의 연구에서 맞벌이 가족의 부인이 남편보다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였고, 아픈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유급휴가의 실시, 남편과 부인의 의료보험카드의 단일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현세대의 개선과 관공서 및 은행의 야간창구 개설 등이 요구한다고 하였다. 김선미(2005)¹¹⁾의 연구에 따르면 잦은 이동과 양육자의 잦은 변경, 미아와 방치 그리고 그 두려움, 어린 자녀에 대한 금융적인 생활의 강요, 전업주부를 어머니로 둔 자녀

10) 황혜원·신정미(2009).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45-71.

11)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05-116.

들에 대한 부러움, 초등학생 방과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요구(학습지도, 인성발달, 포괄적인 돌보기 등)가 있었다. 또 김유경 외(2008)의 맞벌이 가족들은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에 돌봄공백과 특수한 아동의 가정 돌봄의 여탁함을 호소하며 돌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여성은 자녀출산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후의 아이를 맡아 돌봐줄 양육처가 없다는 것은 여성에게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다. 특히 자녀의 연령과 가족특성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가족 돌봄 지원 체계 및 서비스 마련이 긴급한 실정이다. 이는 곧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일하는 여성의 중단 없는 지속적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 일이며, 저출산 해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¹²⁾ 연구에서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의 원인으로 '가정과 직장일 모두 수행할 시간이 부족함(30.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에서도 자녀돌봄의 부담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은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지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돌봄을 위한 주변의 자원 활용가능성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하는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노인돌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주돌봄자였던 기혼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 효의식의 약화와 부양부담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 자기 돌봄 또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희금 외(2010)의 조사에서 노인부양에 대해서는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에 대해서 중도적 입장을 보이면서 노부모와의 동거, 경제적 부양, 딸과 아들의 동등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사에서 주돌봄자는 배우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이 며느리, 자녀의 순이었고 2006년 <가정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에서도 노인의 주돌봄자는 83.3%가 여자인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가정 내 노인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동일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족원을 돌보는 과정에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생활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돌봄이 필요한 기타 가족원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변화 내용	%
아무런 변화가 없다	0
가족간의 갈등 증가	7.9
경제적 어려움	56.5
직장생활의 어려움	0
신체적인 고단함	21.9
정신적 스트레스	12.3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강화	0
기타	1.4

자료: 조희금 외(2010), 2차 가족실태조사 재구성.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결혼 및 출산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국 가정의 돌봄영역은 더 이상 개별 가정에서만 수행되는 것에 한계를 갖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서 국가정책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되며, 이는 가정의 또다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돌봄지원의 적극적인 노력인 가정의 위기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3) 가족의 해체적 위기

다양한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배우자의 사망뿐만 아니라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배경(원인)으로 나타나며, 전체 가구 중 1990년 889천 가구에서 2005년 1,370천 가구로 증가,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가 8.6%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9; 박정윤, 2010 재인용¹³⁾). 한부모가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별, 이혼, 미혼모의 순으로 이외에도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미혼모, 별거, 유기 등으로 발생한다. 여러 한부모가족 발생원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간 이혼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율과 이혼율의 비율이 33% 달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혼율

은 OECD 국가 중 3위에 이르고 있어(송다영, 성정현, 한정원, 2003),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 및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모부자비율을 살펴보면 모자와 부자가구 비율을 비교하면 모자가구가 부자가구에 비해 3.5배 많으며 최근에는 한부모가족의 파생형태인 조손가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손가족은 한쪽 부모와 사는 가정과는 또다른 특성과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들의 지원은 일반적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차원과 는 달라야 한다(박정윤, 2010). 한부모가구 형성원인은 2005년 현재 배우자 사망(36.63%), 이혼(29.1%), 배우자 가출 및 유기(23.9%), 미혼모(1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증가가 확연하다. 이는 부모의 생이별로 한부모가 되며 한부모가정의 생활 뿐만 아니라 비동거 또는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우울감, 좌절감, 실패감 등을 느끼는데, 이러한 혼란은 3~5년 간 지속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Amato, 2000¹⁴⁾; Wallerstein & Blakeslee, 1990¹⁵⁾). 정서적 혼란이 깊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황은숙, 2007)¹⁶⁾. 뿐만

13) 박정윤(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부모가정관련 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67-178.

14) Amato, P. R.(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November), 1269-1287.

15) Smilansky, S.(1992). Children of Divorce: The Roles of Family and School, Rockville, MD: BJE Press.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부모나 자녀 모두 역할에 대한 혼란감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부재로 동일시 대상이 없어짐으로서 발달장애 또는 역할동일시에 대한 학습결핍 등이 발생한다. 모자가족의 모와 자녀는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이를 분담해야하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한다. 모자가족의 대부분의 모는 부양자로서 부의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자녀 특히, 딸 자녀가 아들인 경우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기대 받던 것으로부터 부로서의 역할을 기대 받게 됨으로써 역할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부자가족의 부가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은 그 동안 배우자에 의해 관리되던 가사 관련 역할 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리 관리자도 없고 자녀는 어리고 일을 계속해야 할 경우, 부자가족의 부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 처하게 된다. 특히 부인이 가출한 경우,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하게 된다.

또,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부모된 상황에 대한 적응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

적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부모가정 부모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자녀들이다. 자녀들은 가정,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Emery & Forehand¹⁷⁾). 이들은 주위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은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들은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을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는’ 가정의 아동으로 인식하거나(성정현 외, 2003), 학교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정의 아동은 학교생활에 더 부적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의 문제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모자가정의 경우, 자녀의 문제나 이상행동, 낮은 학업성취도, 학교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부자가정의 경우는 실제적인 자녀 보살핌과 관련된 청소, 요리, 빨래, 자녀 머리손질 및 목욕시키기, 학교준비를 챙기기, 숙제 봐주기, 학교급식당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황은숙, 2007)¹⁸⁾.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그 고충은 더욱 크다. 이혼 한부모의 경우 전배우자로부터의 지정된 양육비나 위자료 지급 불이행, 구직의 어려움, 직업의 불안정성

16) 황은숙(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1),1-20.

17) Emery, R & Forehand, R(1994).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Haggery, L. Sherrod, N. Garnezy & M. Ruttera(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황은숙(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2(1),1-20.

과 낮은임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3. 위기가족을 위한 가정정책의 방향

가정의 위기는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실직과 빈곤화로 인해서 개별 가정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족관계가 악화되어진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등은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에 투입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기혼여성의 역할로 여겨져왔던 가정 내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의 또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자녀와 노인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으로 인해서 일하는 여성은 일-가정의 이중부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역할과중은 부부갈등을 심화시키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과 기피경향으로 인해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 노인단독가정과 독신노인가정의 돌봄부담이 노인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으로 가정형성에서부터 유지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취약해지는 가정유형 중 하나가 한부모 가정이다.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정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개별 가정이 스스로 문제해결 하는데 많은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제시한 가정의 위기적 상황에 따른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의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는 다양하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가족개인의 심리적 문제, 가족관계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가족지원책은 IMF경제위기 당시와 큰 변화 없이 물질적 긴급지원에 치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이 자립적으로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매우 미미하며, 존재하는 경우 상징적 의미가 높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정책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사후개입적 측면이 강하다. 즉, 이미 중산층에서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뒤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시급부의 형태의 지원이 많고, 관련 주요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아닌 중복 지원이 드러나고 있었다. 관련부처들의 중복지원은 복지관련 지원서비스 전달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면서 국고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막고 복지수혜층을 확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후개입적 정책은 가족의 탄력성 즉, 자립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의 경우 중산층 가정 중 위기직면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외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장세제, 예방기금마련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을 단

위로 지급되고 있는 다양한 수당지급제도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가족의 탄력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김유경 외, 2009)¹⁹⁾.

또, 현 국내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에 처한 실직가정이나 중산층 가정 지원 서비스는 경제위기 발생 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히 자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서비스 내용 역시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위기에서 가족이 견딜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 개인의 심리·정서적 역량과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예방교육 및 상담이 생애주기별 혹은 가족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앞에서 가정의 돌봄기능의 약화가 가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돌봄 지원은 양육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휴가제 도입,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일-가정의 양립지원, 보육의 공공화, 가구소득별 보육부담률 차등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의 보편화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돌봄지원을 위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주와 정부의 피고용자를 위한 근로환경마련이 필요할 것이

다. 또, 자녀돌봄 지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과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관련한 제도시행도 주무부처를 선정하고 단일화 되어 보다 강력한 제도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가족들의 돌봄은 위기 이전보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돌봄지원 제도는 위기 이전의 지원정책에 추가적인 지원은 매우 추상적이고 효율성이 측면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기가족의 돌봄 관련 이용가능한 자원 확보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서비스는 매우 미진하다. 노년기 가족의 돌봄은 자녀돌봄 지원에 비교해 볼 때 관심 밖으로 개별 가정에서 주어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이 최근에 마련되어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고 돌봄 주제공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률을 높이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돌봄부담의 경감 및 노인지원을 위한 통합적 체계를 구비하여 노인과 그 부양가족에 관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위기노인 및 위기가족의 노인부담경감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부재하다. 즉, 경제위기로 노인은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대를 더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음으로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

19) 김유경 외(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활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는 방편이 고려되어야 하며, 위기상황에서 독거 노인 또는 노인부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더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해체로 인해 위기가족으로의 전략율이 증가하거나 더 큰 어려움 혹은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유형이 한부모가정이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우선 한부모가족지원을 근거로 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공포로 양육비 소송지원, 주거안정 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지원비의 지속적 확대, 취·창업지원서비스 주거시설 확충 및 개선, 정서 및 사회적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다.

양육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맞춤형 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확충 사업 실시하고 있고, 정서, 사회적 지원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실시 중이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혼관련 서비스로는 이혼전후 상담, 이혼양육합의서 개발 및 실시 독려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혼전후 가족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발 및 전국센터 종사자 및 강사 대상 이혼전후 가족지원관련 교육 실시하고 있다(김혜영 외, 2010)²⁰. 다양한 한부모가족대상 프로그램을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정서·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도 한부모가정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도록 세분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지원은 대부분 자녀돌봄과 경제적

회복 등을 통해 자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경제위기가 가중되었을 때 더 심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지원대책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 특히 경제적 위기하의 한부모가정은 현재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으로 이를 예방하는 통합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이 한부모가족에게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상황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가족탄력성 강화교육을 보다 확대 실시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발생과정에 따른 문제가 상이함으로 그에 대한 접근방식 역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정의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는 특정 서비스에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손가정이나 미혼한부모에 대한 지원책은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행이나 그 효과성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지원방안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정윤, 2010).

4. 나가며

지금 한국의 가정은 다양한 변화와 위험 속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대한 부담과 위기극복은 개별 가정에서 가져가야할

20) 김혜영 외(2010).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관련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담으로 남겨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 개별 가정의 기능이었던 많은 부분들이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그 기능이 축소 또는 전환되기도 하였으며, 일부의 기능은 더 강화되기를 기대받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라는 암초는 가정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힘으로 여겨지며 이는 가족들의 결속력, 응집력, 헌신이나 유대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에게 과거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기능을 기대하면서 과부하를 야기하게 되고 결국 가족원들은 가족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가족은 더 이상 스스로 자생하여 제기능 하는데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결국 개별 가정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개별 가정이 자생력과 역량을 갖고 위기상황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정책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기가족은 그 발생과정에서부터 경험하는 문제의 범위가 광범위함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위기가족에 대한 접근은 현재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잠재적 문제가 갖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가족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통합성을 지향하며, 예방성과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문**